제364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주요업무 현황

2018. 10. 19.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목 차

Ⅰ. 일반현황 ····· 1

1. 설립 목적 및 연혁 ····· 3
2. 주요 의결기구 ····· 4
3. 조직 및 정원 ····· 5
4. 주요 업무 및 가입자 현황 ····· 6
5. 2018년도 예산 현황 ····· 7

Ⅱ. 주요업무 현황 ····· 9

1.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 11
2. 부과체계 개편 등 국민 관점의 제도 개선 ····· 14
3. 철저한 재정관리로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 16
4. 장기요양서비스 확대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17
5.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사업 강화 ····· 19
6.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 ····· 21
7.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 22

Ⅲ. 감사 및 민원사무 처리 현황 ····· 25

1. 감사실시 및 조치 현황 ····· 27
2. 민원사무 처리 현황 ····· 28

Ⅰ.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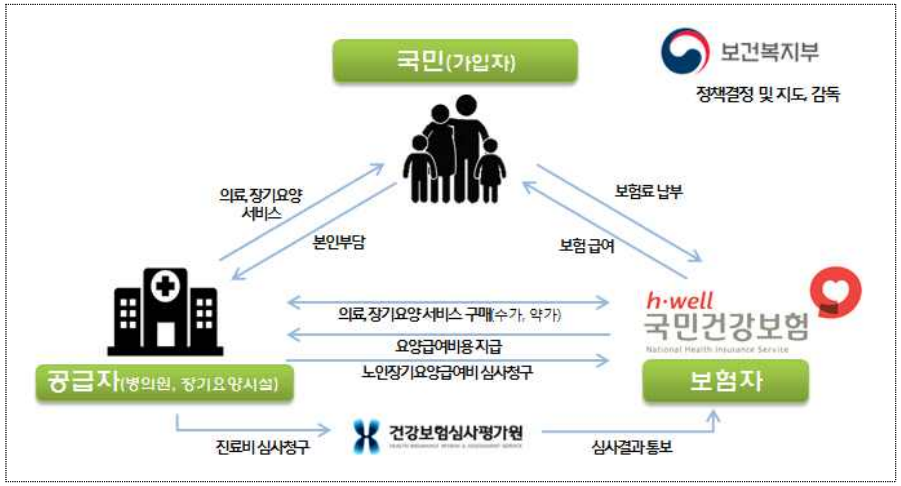
1. 설립 목적 및 연혁
2. 주요 의결기구
3. 조직 및 정원
4. 주요 업무 및 가입자 현황
5. 2018년도 예산 현황

1 설립 목적 및 연혁

❑ 설립 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 가입자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및 보험재정 등을 관리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임



❑ 주요 연혁

○ 1977. 7. 1. … 최초 의료보험 실시(종업원 500인이상 사업장)

○ 1988. 1. 1. …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

○ 1989. 7. 1. … 도시지역 확대로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 2000. 7. 1. …「국민건강보험공단」출범

○ 2008. 7. 1. …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 2011. 1. 1.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2 주요 의결기구

❑ 이사회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

- (기능) 사업운영계획과 예산·결산, 정관 변경 등 공단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 구성(15인) : 이사장 및 이사 14인(상임 5인, 비상임 9인)

- (의장) 이사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 (이사) 비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

> ■ 노동조합·사용자·시민·소비자·농어업인·노인단체 추천 각 1인(6인)
> ■ 이사장 임명 5인(상임이사)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인

❑ 재정운영위원회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 (기능)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

○ 구성(30인)

- 직장·지역가입자 및 공익대표 등 각 10명으로 구성
- 위원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공익대표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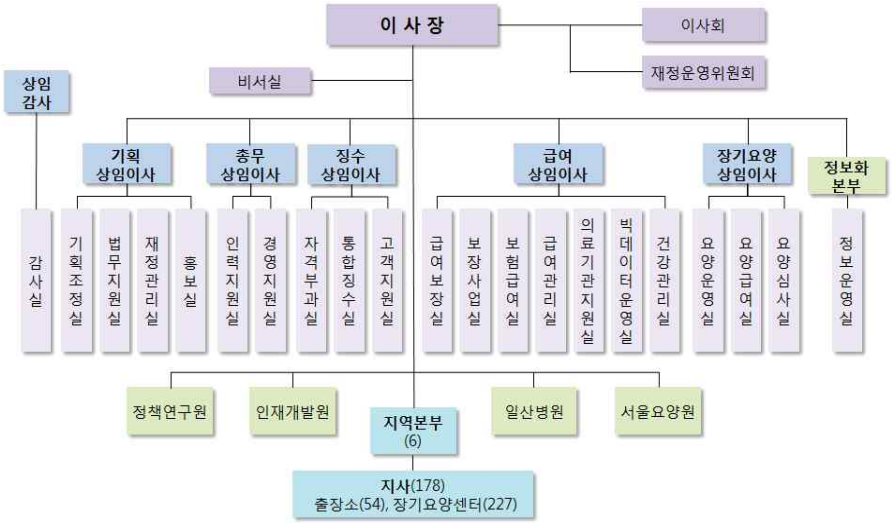
3 조직과 정원

❑ 조직

○ 본부(21실 1본부 2원), 지역본부(6), 지사(178), 출장소(54)

-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별도 운영

'18.9.30.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13,894명

'18.9.30.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	임원	1급	2급	3급	4급이하	연구	기능
계	13,894	100.0	7	127	561	2,276	10,822	81	20
건강보험	10,233	73.7	6	122	459	1,769	7,800	58	19
장기요양	3,661	26.3	1	5	102	507	3,022	23	1

○ (소속기관) 일산병원 1,339명, 서울요양원 118명

4 주요 업무와 가입자 현황

❑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	◈ 가입자(외국인 포함) 자격관리 ◈ 지역 및 직장 보험료 부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고지 및 징수
보 험 급 여	◈ 수가 및 약가 계약 ◈ 급여비용의 지급 및 급여사후관리
건강검진 및 증진·예방	◈ 질병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 급여비용 심사·지급관리 및 기관 평가
기관 운영사업	◈ 재정(자산) 관리, 의료(요양)시설 운영 ◈ 조사연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
정부 수탁사업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공무상 요양비 지급 등 19개 수탁사업 수행

❑ 가입자 현황

건강보험('18.8.31.현재)

◈ **총 가입자 : 5,103만명**

※ 외국인(재외국민) 95만명 포함

◈ **직장가입자** : 3,713만명(72.8%)

- 가 입 자 1,728만명
- 피부양자 1,985만명

◈ **지역가입자** : 1,390만명(27.2%)

- 세 대 주 656만명
- 세 대 원 734만명

장기요양보험('18.8.31.현재)

◈ **65세이상 노인 : 752만명**

※ 전체인구의 14.0%

◈ **등급인정** : 64.5만명(노인의 8.6%)

- 1등급 4.5만명
- 2등급 8.4만명
- 3등급 20.6만명
- 4등급 25.1만명
- 5등급 5.0만명
- 인지지원 0.9만명

◈ **서비스 이용** : 54만명

※ 등급인정자의 83.1%

5 2018년도 예산 현황

❑ 총 예산은 70조 6,162억원

- ○ 건강보험은 '17년 대비 6조 1,566억원(10.8%) 증가한 63조 3,199억원
- ○ 장기요양은 '17년 대비 1조 5,251억원(27.8%) 증가한 7조 90억원
- ○ 통합징수는 '17년 대비 60억원(2.0%) 감소한 2,873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예산(A)	2018년 예산(B)	증감 (B-A)	%
계	629,405	706,162	76,757	12.2
■ 건 강 보 험	571,633	633,199	61,566	10.8
○ 일 반 회 계	568,880	630,006	61,126	10.7
○ 특 별 회 계	2,753	3,193	440	16.0
■ 장 기 요 양	54,839	70,090	15,251	27.8
○ 일 반 회 계	54,795	70,042	15,247	27.8
○ 특 별 회 계	44	48	4	9.1
■ 통 합 징 수	2,933	2,873	△60	△2.0

■ 건강보험

▷ (수입) 보험료(53조 3,168억원, 84.2%) ⊕ 정부지원금(7조 6,160억원, 12%) ⊕ 부당이득징수금 등 (2조 3,871억원, 3.8%)

▷ (지출) 보험급여비(60조 9,420억원, 96.3%) ⊕ 관리운영비(6,971억원, 1.1%) ⊕ 주요사업비 등 (1조 2,580억원, 2.0%) ⊕ 심평원부담금(3,369억원, 0.5%) ⊕ 예비비(859억원, 0.1%)

■ 장기요양

▷ (수입) 보험료(3조 8,525억원, 54.9%) ⊕ 국고지원금(7,121억원, 10.2%) ⊕ 국가 · 지자체 부담금(1조 4,062억원, 20.1%) ⊕ 부당이득징수금 등 (1조 382억원, 14.8%)

▷ (지출) 요양급여비(6조 6,220억원, 94.5%) ⊕ 관리운영비(2,390억원, 3.4%) ⊕ 주요사업비 등 (1,104억원, 1.6%) ⊕ 예비비(376억원, 0.5%)

■ 사회보험통합징수

▷ (수입) 사회보험별 분담금(건강보험 1,889억원, 국민연금 690억원, 산재보험 145억원, 고용보험 148억원) ⊕ 석면피해구제기금(1억원)

▷ (지출) 관리운영비(1,965억원) ⊕ 주요사업비 등(803억원) ⊕ 예비비(105억원)

Ⅱ. 주요업무 현황

1.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2. 부과체계 개편 등 국민 관점의 제도 개선
3. 철저한 재정관리로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4. 장기요양서비스 확대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5.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사업 강화
6.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
7.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1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내역 자료를 수집하여 보장률 등 지표를 산출하고, 정책 평가·수립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

* ('17년 기준) 요양기관 종별 약 2,000기관 조사

○ **(보장성 모니터링)** 보장성 강화계획 실행 이후 계획 대비 실 급여비 지출 추이 및 의료이용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에 환류

○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분석체계 강화)** 구축 완료된 원가 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서버 구축 등 고도화('18.7~12월)

-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에 따라 원가자료 제출기관 확대

○ **(공사의료보험 개선)** 보장성 강화로 실손의료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용역 추진 (KDI, '18.3~7월)

-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정책협의체*, '18.9.21.)

* 복지부, 금융위, 건보공단, 심평원, 금감원, 보험개발원 등 참여

❑ 주요 비급여 해소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 지역본부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원가기반 수가 개선, 성과 중심 보상으로 사업 확산 및 서비스 질 향상 유도

* ('13년) 13개소 1,423병상→('17년) 400개소 26,381병상→('18.8월) 444개소 32,301병상

○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해소)** 선택진료제도 폐지('18.1월),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18.7월)

* 4인실 입원료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 ~160%(상급종합) 적용(단, 중증호흡기질환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1인실 적용 예정('19년))

○ **(한방·치과 보장성 강화)** 관련 협회·학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한약첩약, 광중복합형 복합레진치료 등 보장성 강화방안 검토

❑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18.1월, 소득분위별 40~50만원 경감)

* (1분위) 122만원 → 80만원, (2~3분위) 153만원 → 100만원, (4~5분위) 205만원 → 150만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15% 초과 시 지원* … 시범사업('18년 상반기) → 제도화('18.7월)

* ('18년 사업대상자 보장률) 지원전 78.1% → 지원후 86.3% … 8.2%p 상승

○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20~60% →10%, '17.10월),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50%→30%, '17.11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30%, '18.7월) 등

○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보장구 급여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

확대 내역	시행시기
급여대상자 확대(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18.7월
수동휠체어 유형 분류를 통한 고가 품목 급여 확대	'18.7월
시각장애인용 보장구(흰지팡이 등) 기준액 인상 및 내구연한 단축	'19년
의지·보조기 급여품목 개선 및 기준액 인상	'20년

❑ 저출산 · 고령화에 대비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제도 개선)** 신청방법 확대 및 지원 금액(기본 50만원→60만원), 지원금 사용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1년 이내), 사용처(1세 이하 영유아 진료비 사용가능) 확대('19.1월 예정)

○ **(호스피스 연명의료 활성화)** 요양병원 시범사업 확대로 취약지 해소(~'19.8월, 11개 기관 123병상 → 16개 기관 204병상)

- 적극적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안내
- 연명의료 교육 강화로 긍정적 인식 확산 노력 … '18년 총 80회 교육

❑ 이해관계자 협력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 강화

○ **(공급자)** 제도발전협의체 등 공급자 소통 강화

-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위해, 의과 · 치과 및 한방 분야별 관련 협회 · 학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 공급자단체, 재정운영위원, 학계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발전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요양급여비용 계약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검토

○ **(국민)** 보장성 강화 주요내용 및 이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

- 국민들이 쉽게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
  * 동영상, 카드뉴스, 팟캐스트, 웹툰 등
- 연령대별 소통채널 다양화를 위해 TV 광고 등 전통매체와 뉴미디어를 균형 있게 활용
- 전국 조직(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 등)을 활용하여 지역 여론주도층 등 대면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

2 부과체계 개편 등 국민 관점의 제도 개선

❑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18.7.1시행) 안착

○ **(추진경과)** 부과체계 개편안 건의 및 철저한 사전 준비

- 복지부 · 공단 주관, 여야 5개 정당 공동 주최 공청회 개최('17.1.23.)
- 여야 합의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4776호, '17.4.18. 공포)
- 국민 혼란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및 홍보('17.7월~'18.8월)
  * 전산개발, 내부직원 교육, 민원대책 수립 등

○ **(주요내용)**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기반 마련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 · 자동차 보험료 부과 축소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 확대 등 소득 상위 1% 적정 부담
- (피부양자) 고소득 · 고재산자 및 형제자매 제외

○ **(성과)** 저소득층 부담은 낮추고, 부과체계 형평성 개선

-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77%) 보험료 인하
- 고소득 · 고재산자 보험료 적정부담으로 형평성 강화(80만 세대)

○ **(향후계획)** 소득보험료 비중 확대를 위한 2단계 개편('22.7월 예정) 준비

- 소득부과 기반 강화를 위한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운영 지원
  *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 및 관계공무원 ·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
-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지원(법 제72조의3)
- 소득보험료 비중 전체보험료 중 92% → 95%로 확대 예상

❑ 국민 관점의 징수 · 납부제도 운영

○ **(징수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지양하고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징수 패러다임 전환

- '압류, 체납처분'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포지티브 안내문 활용

○ **(국민편익을 높이는 납부체계 개선)**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빠른찾기시스템' 구축('18.5월) 등

* 신용카드 1% → 0.8%('17.2월, 국세와 동일), 체크카드 0.7% → 0.5%('18.7월)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납부능력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한 결손처분으로 수급권 보호

❑ 외국인 등 자격 · 부과관리 개선

○ **(임의계속가입제도 확대)** 이직이 빈번한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 적용기간 및 가입대상 확대('18.7월)

구 분	기 존	개 선
적용 기간	24개월	36개월
가입 대상	실직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	실직전 1.5년 동안 직장가입기간 합산 1년 이상

○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 요건 강화 등 추진)**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일부 체류자격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8.29～10.8)

- 외국인 세대 합가 기준 축소, 외국 발행 서류에 대한 해당국 외교부 확인 등 관련 고시 연내 개정 예정
- 외국인 전담민원센터 시범설치 · 운영으로 내 · 외국인 민원혼재로 인한 장시간 대기 등 내국인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에게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18.7.23., 서울 서남부권(신도림)

3 철저한 재정관리로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 국민 부담 증가 최소화를 위한 수입기반 강화

○ **(준비금의 효율적 운영)** 금융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능동적 대응, 투자상품 다변화로 수익률 등 운용성과 향상 노력

○ **(효율적 징수활동 추진)** 체납기간 및 유형별 특성*에 맞는 징수기법 적용

* (체납기간) 단·중·장기 구분 / (체납유형) 체납상위 9개 업종, 19개 전문직종

-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 · 전문직, 호황업종 대표 등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은닉재산 발굴 · 압류 · 공매 등 강제징수 강화

* (건강보험) 6만세대, 1,265억원 / (국민연금) 24만명, 9,598억원

- 외부기관 징수자료 연계 확대를 통한 효율적 징수활동 추진

❑ 재정누수 방지를 통한 지출 증가 억제

○ **(사무장병원 등 관리강화)** 사무장병원 규제 및 행정조사 강화

- 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실행과제* 추진(20개 과제)

* 진입규제 6개, 처벌강화 8개, 부당이득 징수 등 6개 → 10개 법안 소위통과

-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행정조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일제단속
- 개설기준위반 환수금 체납자 특별징수기간 운영('18.6~10월)

○ **(부당청구 억제)**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

- 부당청구 유형변화에 대응하여 급여관리시스템(BMS) 고도화 추진
- "진료받은 내용 안내" 발췌유형 추가로 진료비 이중청구 방지

○ **(자료연계를 통한 누수방지)** 심평원 등 유관기관 자료연계 강화

- 의료인력 자료공유로 인력가산 부당청구 방지, 요양기관 조사 자료 공유로 중복조사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등

4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치매 관련 부담 완화

○ **(인지지원등급 신설)** 신체 기능상태와 관계없이, 치매질환자에게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하여 수혜대상 확대('18.1월)

- 80세 이상 치매, 독거노인 등 고위험 취약계층 수급자 적극 발굴
- 최근 2년('16~'17년)내 치매진료자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탈락자 및 미신청자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 발송 등 홍보 강화

○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 기존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까지 확대('18.8.1.)

- 감경 확대에 필요한 법령·고시 개정, 감경 정보시스템 개선
- 제도 변경 후 감경대상자 증감 현황 분석 등 모니터링 강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중위소득 50%이하	⇒	보험료 순위 25% 이하	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
감경률	50%		60%(10%↑)	40%(신설)
감경인원	96,255명('18.7월)		204,379명('18.9월)	

❑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

○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대상* 및 이용기준 완화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17.12월) 107천명, 741개소 → ('18.4월) 201천명, 2,045개소

○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전문상담인력*이 제공하는 개별상담, 집단 활동으로 가족의 심리적 부양부담 완화(30개 운영센터, 약 1,000명)

* 정신건강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강화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지원)** 현장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참여 확대

* ('18.8월말 기준) 치매전담실 40개, 노인요양그룹홈 2개, 주야간보호 22개

○ **(노인복지관 시범사업)**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기존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외 노인복지관 인프라를 활용해 서비스 제공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기능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지원 프로그램과 개인별 선호에 따른 여가·운동·건강프로그램 제공

* 1차 시범사업('18.4~7월, 37개 기관), 2차 시범사업('18.9~12월, 39개 기관)

○ **(종사자 치매전문교육 강화)** 치매전담형 기관 증가와 인지지원등급 대상자를 위한 인지활동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 교육 강화

* ('17년) 12,600명 → ('18년) 26,000명, 106.3%↑

○ **(종사자 처우개선 등 지원)**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월 4~7만원, '17.10월~),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연중 실시

❑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 **(적정수가 산정)** 원가분석체계 구축, 가감산제도 개선 등

- 장기요양기관 경영패널을 활용한 수가수준 적정성 검증,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액의 적정성 검토 등

○ **(재정누수 방지)** 부정수급 사전 예방시스템 고도화 등

- 청구상담봉사자를 활용한 적정청구 및 부당청구 사례교육
- 공익신고 활성화 및 급여받은 내역 통보 등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참여 의무화 추진

5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사업 강화

❑ 건강검진체계 내실화로 질병 조기 발견 확대

○ (검진체계 개편) 건강위험요인별(질환·연령) 맞춤형 건강검진 도입

- 성·연령별 목표 질환에 맞는 검진항목 및 주기 확대*('18년~)

  * 우울증 검사(20세 이후 10년 주기), 인지기능장애(66세 이상 2년 주기) 등

- 20~30세대(지역세대원 · 직장 피부양자) 국가 건강검진 확대('19.1월~)

○ (취약계층)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검진 서비스 접근 기회 제고

- 장애인 검진편의 제공을 위한 건강검진기관 지정* · 운영('18.7월~)

  * 목표 : ('18) 8개소 → ('19) 28개소 → ('22) 100개소

-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검진 접근성 제고

  * (시 · 청각장애인) 점자검진표·수화동영상, (다문화가정) 다국어 검진 서식 등

○ (검진 평가 강화) 통합3주기 국가건강검진 기관 평가* 실시('18~'20)

- 미흡기관은 사후관리 후 재평가, 2회 이상 연속 미흡기관은 행정처분 의뢰

  * 대상기관 21,716개소(병원급 이상 1,689개소, 의원급 20,027개소)

❑ 생활터 중심의 검진사후 관리 강화

○ (사업장 단위 건강지원서비스) 사업장 특성에 따른 사후관리 프로그램(보건교육, 건강상담 등) 지원 및 건강위험 지표 안내문 제공*

  * 대사증후군 고위험 사업장(1,568개소), 대사증후군 발견율 등 8개 항목

○ (모바일을 활용한 서비스) ICT기반의 상담·정보제공·서비스 등 지원으로 자가관리 능력 향상과 생활습관 개선 유도

- 건강관리 콘텐츠 및 서비스 알고리즘 개발, 시범사업 추진 등

❑ 이해관계자 협력 기반의 증진사업 확대

○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 건강검진 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만예방 · 관리사업 추진

- 지역별 비만지표 공표, 비만백서 발간 등

○ (보건소 등 지역사회 연계사업)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중 건강검진 결과 활용 동의자를 보건소 등에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16) 2,416천명 → ('17) 3,496천명 → ('18.8월) 2,038천명

○ (금연치료 지원사업)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등) 구입비 지원*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로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 상담

  * ('15) 228천명 → ('16) 358천명 → ('17) 408천명 → ('18.8월) 496천명

❑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증진 도모

○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질환예측 서비스) 건강iN 홈페이지를 통해 3년 내 당뇨병 발생 위험예측 및 생활습관 개선가이드 제공

○ (국민건강 알람서비스 질환 확대) 진료 · 기상 · 환경 자료, 민간 SNS 등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5개 질병* 발생 위험 등 알람서비스 제공

- 뇌혈관질환, 수족구병 등 알람서비스 대상질환 확대 추진 중

  * 감기, 눈병, 식중독, 천식, 피부염

○ (취약계층 대상 빅데이터 기반 건강서비스 개발) 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한 취약계층(다문화 가정 등) 건강분석 및 맞춤형 서비스 발굴로 취약계층 건강지원 강화

6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

❑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 돌봄체계 강화

○ **(커뮤니티케어 추진 지원)** 해외사례 검토, 통계자료 산출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재가급여 강화 등 사업 개선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장애인이 의사 1인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 · 포괄적으로 받도록 지원

○ **(아동보호 지원)** 취약 · 위기 아동의 조기 발굴을 위한 정부의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 운영 지원 … 진료내역, 검진 기록 등 공단 보유 빅데이터 공유

○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방문요양 · 목욕 · 간호 ·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 혼합이 가능한 맞춤형 통합재가급여 실시('19년 예정)

○ **(이용지원서비스 강화)** 등급판정자의 재가생활과 적정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상담, 장기요양이용계획 수립 등 사례관리체계 구축

❑ 지역단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 **(통합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 통합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 지원('18.12월~) …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매뉴얼 제작 배포 등

- 일차의료지원센터 확충*을 통한 만성질환자 교육 및 상담서비스 강화

  * 공단 7개 운영, 간호사·영양사·운동처방사 배치

○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건강지표 제공)** 전국 지역별(읍·면·동), 사업장별 건강지표를 제공*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 비만율, 흡연율, 고혈압, 당뇨병 등 건강위험 및 의료이용지표 57종

○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시각화 시스템 구축)** 의료이용 행태, 의료자원 분포 및 교통인프라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간 의료 이용과 건강격차 시각화 서비스 구축·제공('19. 상반기)

7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추진

- 기간제 전원 전환 완료('17.12월), 파견 · 용역 근로자 연내 전환 예정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 종합 전략을 수립하여 공단 고유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과제 추진 중

- 사옥내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중증장애인 베이커리카페 창업, 대국민 · 내부 아이디어 공모 등 혁신적 일자리 발굴 진행 중

❑ 국민과의 소통 · 참여 채널 확대

○ **(공단 팟캐스트 운영)** 청취자와 소통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 건강보험제도 및 건강정보를 시의성 있게 전달*('18.4월~)

  * 총 127건 제작, 누적 조회수 1,201,286건('18.8월 기준)

○ **(국민토론방 · 건강보험모니터단)** 홈페이지 내 국민참여 공간을 마련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단 운영 및 업무개선 등에 반영

  * ('18.1～9월) 국민토론방 의견등록 1,471건, 모니터단 제안 155건

○ **(국민참여위원회 활성화)**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을 보완하여 국민의견을 반영하는 소통 창구로 활용 활성화*

  * 병의원 상급병실 적용방안('18.5월), 고가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방안 ('18.7월) 등 '12.9월부터 9회 개최(비정기, 일반국민 대상으로 인력풀 90명 모집)

❑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성장 지원

○ **(빅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활성화)** 기존 DB에 사회경제적 요인, 가족력 정보 등을 추가한 '국민건강정보DB 2.0' 구축·개방

- 분석센터 확장 및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등 이용환경 개선*

  * 원격계정 증설(180 → 200개) 및 분석센터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150석)

○ **(빅데이터 신기술 접목 확대)**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 강화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 혁신

○ **(의료소비자 법률상담지원)** 국민들이 의료 이용 과정에서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내부 변호사를 활용하여 상담·지원('18.9월~)

○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민원서류 자동 발급)** 주민센터·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3,800여대의 정부 무인발급기 활용(납부확인서 등 7종 발급)

○ **(4대 사회보험 증명서식 통폐합·간소화)** 납부확인서 등 4대보험 간 유사서식 통폐합으로 민원서식 발급 불편 해소(41종→15종)

○ **(모바일 민원서비스 확대)** M건강보험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개시(인터넷 지로시스템(금융결제원)연계), 간편 사용자 인증(지문인식 등) 도입 등

❑ 공단만의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눔경영 실천

○ **(지역사회 기반 활동 강화)** 빨래봉사, 집수리봉사 등으로 지역사회 협력 강화 … 건강보험 작은 공부방, 독거노인 사랑잇기 드림콜서비스 등

○ **(공단만의 특화 사회공헌 활동 추진)** 공단 전문인력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의료봉사', '치아사랑봉사' 등

❑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및 근로환경 개선

○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18년 상반기 장애인* 51명(신규채용 인원의 10.4%), 이전지역 출신 인재 71명(대상 인원의 34.3%) 임용**

  * 하반기 채용예정인원 500명 중 62명(12.4%)을 장애인으로 채용 추진

  ** 혁신도시법에 따른 '18년 목표(18%) 초과 달성

○ **(장애인 편의 환경 조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제공

  * 사옥별 중증장애인 근무적합성 등 점검(222개 사옥, 적정설치율 70.4%)

○ **(일·가정 양립 활성화)** 「해피-워라밸」 캠페인 추진

- 초등학교 1학년 자녀양육직원 출근시간 10시로 조정('18.7월)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협약 및 컨설팅 추진('18.9월~)
-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3급 이상 23.4%로 정부 목표 20.9% 초과 달성)

❑ 전문성 강화 등 직장문화 개선

○ **(유관기관과의 연구 협력 강화)** 심평원과 중복연구 검증, 연구정보 교류 등을 위한 연구협의체 구성 및 공동세미나 개최('18.9.5.)

○ **(전문역량 강화)** 기존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경력직(의사, 간호사, 약사 등) 채용 확대

○ **(참여형·토론형 직장문화 구축)**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체계 구축, 토론수업 활성화 및 교육지원 확대

  * 지사별 1명 이상 양성하여 부서 현안 토론 등에 활용

○ **(혁신스타트업)** 직원의 혁신적 사고·창의적 아이디어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한 조직에 대한 만족도 제고

Ⅲ. 감사 및 민원사무 처리 현황

1. 감사실시 및 조치 현황
2. 민원사무 처리 현황

1 감사실시 및 조치 현황

❑ 외부 감사 … 조치완료

구분	감사 내용	감사기간
감사원 (5건)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17.3.22.~4.18.
	노인 의료사업 지원 성과분석	'17.4.24.~5.31.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관리실태	'17.6.26.~7.21.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18.5.31.~6.28.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실태	'18.6.18.~7.6.
보 건 복지부 (7건)	비상상황대비 공직복무 및 행동강령 점검	'17.2.20.~2.28.
	대선시기 공직복무 및 행동강령 이행상황 점검	'17.3.16.~3.30.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복무 및 행동강령 이행상황 점검	'17.6.28.~7.9.
	2017년 을지연습 기간 공직복무 및 행동강령 이행상황 점검	'17.8.21.~8.24.
	비상상황 및 추석명절 공직기강 점검	'17.9.6.~10.9.
	설 명절 공직복무 및 행동강령 이행상황 점검	'18.2.6.~2.18.
	남북정상회담 기간 공직복무 및 행동강령 이행상황 점검	'18.4.25.~5.4.

❑ 자체 감사 처분요구 현황 … 조치완료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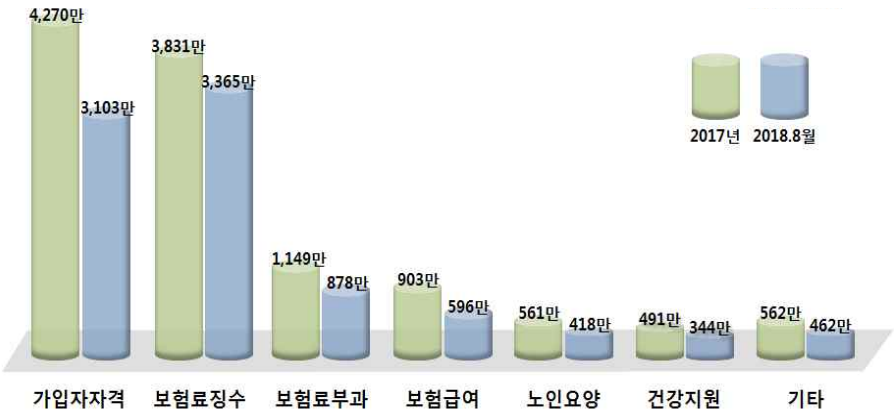
구 분	계	2017년	2018.1~9월
계	3,972	2,257	1,715
시 정	2,118	1,211	907
주 의	642	149	493
경 고	125	51	74
개 선	155	88	67
권 고	212	138	74
통 보	693	604	89
징계요구	27	16	11

2 민원사무 처리 현황

❑ 민원사무 처리 현황

'18.8월말 현재 (단위 : 건, %)

구 분	계(비율)	2017년	2018.8월
계 (비율)	209,346,220 (100.0)	117,685,570(100.0)	91,660,650 (100.0)
가입자자격	73,735,096 (35.2)	42,702,792 (36.3)	31,032,304 (33.8)
보험료징수	71,963,100 (34.4)	38,310,149 (32.5)	33,652,951 (36.7)
보험료부과	20,277,671 (9.7)	11,497,359 (9.7)	8,780,312 (9.6)
보 험 급 여	14,988,820 (7.2)	9,031,336 (7.7)	5,957,484 (6.5)
노 인 요 양	9,792,737 (4.7)	5,613,732 (4.8)	4,179,005 (4.6)
건 강 지 원	8,354,889 (4.0)	4,912,225 (4.2)	3,442,664 (3.8)
기 타	10,233,907 (4.9)	5,617,977 (4.8)	4,615,930 (5.0)

※ 전화, 우편/팩스, 방문, 인터넷 등

(단위: 건)